한국 2026년 노인인구 20% 넘는다

〈65세 이상〉

■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께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전체 인구의 절반만이 생산에 참여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정점 인구 감소=우리나라 총 인구는 오는 2018년 4천934만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4천234만3천명까지 감소하는 등 5천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이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늘어나지만 가임여성 자체가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는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05년 43만8천명에서 2010년 43만4천명, 2050년 22만6천명으로 꾸준히 감소될 전망이다.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9.1%에서 2018년 14.3%, 2026년 20.8%, 2050년 38.2% 등으로 빠르게 늘어난다. 2018년 '고령사회'가 된 뒤 2026년에는 인구 3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기대 수명은 2005년 78.6세에서 2030년 83.1세, 2050년 86세로 늘어난다. 여성의 경우 2050년 기대 수명이 88.9세로 거의 90세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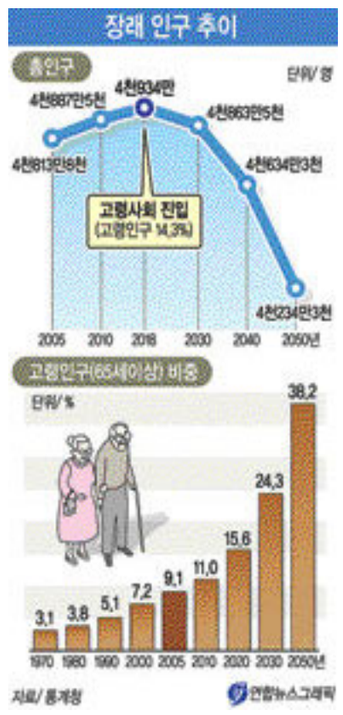
반면 14세 이하 아이들의 인구 비중은 2005년 현재 19.2%에서 2030년 11.4%, 2050년 8.9% 수준으로 계속 낮아진다. 이에 따라 '노령화 지수'도 2030년 214명에서 2050년 429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14세 이하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타내는 비율로 2005년 47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50년 인구 절반이 경제 떠맡아=고령층이 늘어나는 만큼 청·중년층의 사회적 부양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71.7% 수준에서 2050년에는 5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절반이 전체 경제를 떠맡게 되는 셈이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 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05년 12.6%에서 2030년과 2050년에는 각각 37.7%, 72%까지 치솟게 된다. 2005년 현재 생산가능 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0년과 2050년에는 각각 2.7명, 1.4명이 부양의 짐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이툰 철군 결의안' 제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與 파병연장안 논란 가열 조짐

'즉각 철군 결의안'에 중도파 의원들 '신중론' 펴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 만료일인 다음달 31일이 다가오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 파병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이툰 부대 철군론이 확산되고 있는 한편 중도적 입장의 의원들은 즉각 철군론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우선 당내 대표적인 진보파인 임종인 의원은 21일 자이툰 부대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이미경 의원을 비롯해 유승희 이광철 정청래,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손봉숙 등 여야 의원 37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이툰 철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은 이라크 철군론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파병기간 만료일이 다가온 만큼 일단 파병기간을 연장하되, 이후 미국과 철군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라크 파병연장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81.2% "집회·시위 여전히 폭력적"

평화시위 민관 공동위 여론조사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각종 단체의 집회.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무총리 산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한명숙총리.함세웅 신부)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집회.시위 행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답변이 81.2% 였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6% 였다. '평화적'이란 평가는 18.1%에 그쳤다.

이 여론조사는 민관 공동위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표본오차는 ±3.1%p이며, 신뢰수준 95%이다.

우리나라의 평화.준법 시위 정착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이미 정착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66.2%가 '상당기간 불법.폭력시위가 지속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또 절반에 가까운 45.5%가 '시위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가운데 응답자 82.5%가 불편사례로 '교통체증'을 꼽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용희 국회 부의장 노대통령 공개 비판

열린우리당 소속 이용희 국회 부의장이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및 인사스타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론스타 사건의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공방을 질타하면서 "대통령이 통수를 못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문제를 갖고 그렇게 싸우더니, 그게 끝나니 검찰과 법원이 붙어서 저렇게 한다"며 "이 X의 정권은 어찌된 게 밤낮 싸움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의장은 이어 "일찍이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 검·경이 싸움하고, 검찰과 법원이 싸움하느냐"며 "그건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노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말이 아니라 보좌하는 사람들이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좌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도 싸워서야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개운찮은 정무부지사 사퇴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요즘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화제는 단연 이근경 정무부지사의 사퇴 이야기다.

J프로젝트를 비롯한 전남 최대 현안사업을 이끌어가는 실무사령관으로서, 사퇴의사를 밝힌 지난 15일까지도 서울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비공식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 등의 극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사퇴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후임 정무부지사를 공모를 통해 경제통으로 영입하겠다'고 발표, 이근경 부지사를 만류하려는 제스처도 없이 5일 만에 사퇴를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도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박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지사가 3개월 전부터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연말까지는 근무하라고 당부했지만 결국 사퇴했다"고 말한뒤 "그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거나, 정무팀과의 알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청 일각에서는 이 부지사의 사퇴파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측면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지사와의 불화설에서부터 정무 라인과의 알력설, 경제 관련업무에 전념하면서도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갈등, 끝이 보이지 않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등 사퇴이유로 떠도는 소문들 가운데 일부는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또 외부에 알릴 수 없는 고충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무부지사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은 공인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감내해야 할 일들로 '비상식적인 사퇴'를 변호해줄 이유는 되지 못한다.

박 지사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 지사는 지난 2년간 경제통인 이 부지사와 호흡을 맞춰왔으며, 대내외에 '찰떡 궁합'을 과시해 왔다. 그런데 그처럼 믿고 일을 맡겨왔던 이 부지사가 박 지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메일을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특히 사퇴의사를 밝힌 15일은 청와대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렸던 '중차대한'날이었다. 박 지사는 그날 보고회장에 들어서기 직전에야 이 부지사의 사퇴소식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믿고 일을 맡겼던 정무부지사의 사퇴소식을 중요한 행사자리에서, 당사자가 아닌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접해야만 했던 박 지사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과연 누구의 탓일까. 정무부지사 사퇴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redplane@kwangju.co.kr